

[종합·해설]

■ 정부, 작통권 '조건부 환수'로 가닥 잡나

내달 SCM회담서 '협상카드' 내밀 듯

(한미 안보협의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연도가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조건부 환수'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미가 다음달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X연도)를 정할 때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자동 순연하는 장치를 뒤야 한다는 게 조건부 환수론의 요지. 조건부 환수론은 정부 일각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중도성향 의원모임인 '희망21' 소속의원 20명도 "(전작권) 환수 시기

상황을 평가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양측 합의하에 X연도를 순연토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데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동북아 안보정세 등이 주요 고려될 전망이다.

정치권 "한반도 안보 고려해야"

열린우리당 '희망21' 소속 의원 20명은 18일 성명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연계하여 그 시기를 신중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표연도 2012년 이전 결정엔 순연

를 신중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X연도를 '2012년 이전'으로 결정하면=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2012년 이전으로 X연도가 결정될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X연도를 순연할 수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SCM에서 환수 목표연도가 결정되더라도 X연도 2년 전부터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 및 안보

필요한 전력기반을 어느 정도 구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X연도 2012년으로 결정=환수 목표연도가 우리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2012년으로 결정되면 정부의 선택 폭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2012년 이후로는 X연도를 순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향후 5년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필수적인 전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위협 요소에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與중도의원 "시기 신중 적용을"

있는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된다는 것. 그렇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최대 2012년으로 X연도를 정하는데 미측의 협조를 기대하는 눈치다.

2012년 이전에 X연도를 결정하더라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순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012년까지 때문에 차라리 우리 정부 입장에서 2012년으로 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한나라-민주 합당 바람직"

"S프로젝트 관광-농업 균형 발전해야"

광주 하남산단·영암 대불산단 방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9일 삼성전자의 납품업체인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주)나영산업을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은 19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당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정책공조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19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관리공단에서 가진 하남산단중소기업대표자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한민 협력' 논란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김무성 의원의 '보수신당 창당론', 작가 이문열씨의 '한나라당이 도로 민정당이려면 문제'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그동안 형성된 이미지를 벗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또 호남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약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 대 비민주 구도 때 내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호남에 올 때 마다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직답을 피했다.

그는 측근들 중 호남인맥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기업에 있을 때부터 그런 것(출신지)을 개의하지 않았고 능력에 따라 (인사) 했는데 그 중에 호남인이

많았다"며 "핵심은 호남인이어서 쓴 것이 아니고 미어 서 쓰고 보니 호남인이었다"고 답했다.

이 전 시장은 '서남해안개발계획(S프로젝트)' 등 광주·전남의 발전 방향과 관련, "어떤 정책도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 관광만으로는 안 되며 산업과 농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이날 광주 하남산단을 방문한 후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을 찾아 직원들을 위로하고 당직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여장을 푼 후 20일 오전 다음 행선지인 전북 정읍으로 향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19일에도 두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 앞에서 전 인민군 군관 및 병사들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사진 오른쪽) 오후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광화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협뉴스

"비전2030 스웨덴식 복지모델 아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19일 정부의 중장기전략인 비전2030은 스웨덴식 복지모델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식 복지모델은 고부담, 고복지이지만 한국의 비전2030은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지향한다"면서 "비전2030이 스웨덴 복지모델을 지향한다는 견해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오는 2030년 한국의 1

인당 국민소득 4만9천달러는 현재의 스웨덴 수준 이상이지만 전체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은 스웨덴의 28.9%(2001년)보다 훨씬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1.2%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은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사회, 사회복지 선진화 등이며 이중 사회복지 선진화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전략이 성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비전 실현을 위한 50개 핵심과제 가운데 32개가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된다"면서 "비전 2030은 사회적 복지가 아닌 투자적 개념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연협뉴스

세계박람회 정부유치위

29일 여수서 열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유치위원회가 오는 29일 여수 현직에서 개최된다.

여수시청에서 열리는 정부유치위원회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 해양수산부, 외교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17개 부처의 장관 등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정부유치위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며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상황 등 세부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유치위원회가 여수에서 개최된 것은 지난 14일 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국회 견고위원 초청 만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여수) 의원이 한명숙 총리에 게 박람회 관계장관회의 여수 개최를 건의했고 총리 가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최진민기자 man21@

정무직 출신 공무원 진퇴 논란

광주시 "시장 떠날 때 응퇴"

"인사권 침해" 일부 지적도

민선 자치단체장과 함께 공직에 들어온 정무직 출신 공무원의 진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조영민 자치행정국장이 이호준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이도 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광주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상 태에서 의회에 대한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전일 민선 단체장의 비서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례는 전국에서 광주 뿐"이라며 "집행부가 의회 인사에 간여한 것은 결단코 아니며 단지 직원들의 여원을 전달할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인사 직제가 심해지면서 나타난 공무원 사이의 의견으로 받아 들여 진다.

하지만 이 전문위원은 처음에는 비서실 요원이었는지라도 이제는 정무직이라기 보다는 전문직으로 인정받아 근무하고 있는 만큼 자리를 비키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같은 인사현의는 지난 5월 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과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광주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상 태에서 의회에 대한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전일 민선 단체장의 비서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례는 전국에서 광주 뿐"이라며 "집행부가 의회 인사에 간여한 것은 결단코 아니며 단지 직원들의 여원을 전달할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in various areas like 정무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동림2지구, 빛고을엔드, 신도시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 Each list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property details, and agent names.